



##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거부 규제 개선

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법령 마련 통해 행안부로부터  
전산자료 제공받아 신청안내문 발송 가능

추진부서 | 경기도 청년기획과 ☎ 031-8008-3439

### 개선배경



- 경기도는 행안부로부터 분기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우편 발송용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왔는데, 행안부가 갑자기 23년 3분기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안내문 발송이 불가능해짐
  - 이로 인해 사업내용 및 신청시기 미인지로 신청을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\*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대량 발생하면서 불만민원 급증함
- \*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: 사회진출기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내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(최대 100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

### 개선내용



- (19년 ~ 23.2분기) 행안부, 분기별 청년기본소득 신청안내문 발송용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
  - (23.6월말) 행안부,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23년 3분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가 유선 회신
  - (23.07.04.) 도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결 요청
  - (23.11.21.)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청년기본소득 관련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며, 주민등록법 제30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도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전산자료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의결
  - (23.11.24.) 행안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근거로 23년 4분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였으나,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24년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가 유선 회신
  - (24.01.05.) 도, '청년기본소득은 「청년기본법」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령상 근거 있는 사업임'을 이유로 행안부에 자료 제공 요청
  - (24.01.18.) 행안부, '청년기본소득은 조례(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)를 근거로 하는 사업에 불과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다\*'며 자료 제공 불가 회신
- \* 행안부는 「청년기본법」 제21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조항에 불과하여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법적근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

- (24.02.05.) 국회의원실(옹혜인 : 행안위 위원) 방문  
\* 행안부의 전산자료 미제공으로 인한 '24년 청년기본소득 추진 애로사항 설명 및 행안부에 전산자료 제공 요청해 줄 것 건의
- (24.02.29.) 법제처에 '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법령상 근거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'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
- (24.06.05.) 법제처, 동 요청이 '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'이라는 이유로 반려
- (24.06.24.) 보도자료 배포\*  
\* 행안부의 전산자료 미제공으로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 증가
- (24.06.25.) 행안부, 보도 설명자료\* 배포  
\*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”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「청년기본법」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 자료를 제공할 계획임
- (24.06.25.) 도, 행안부에 추가 질의 및 전산자료 제공 재요청\*  
\*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「주민등록법」 제47조 제4항 제1호),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가능 여부
- (24.07.01.) 이상식 국회의원(행안위)이 행안부 장관에게 전산자료 미제공 상황 현안 질의 예정 통보
- (24.07.03.)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관련 회의 추진  
\* 행안부 주민과장, 경기도 열린민원실장·청년기획과장·청년정책팀장·담당자 참석
- (24.07.09.) 행안부,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근거 법령 마련 조건부\*로 24년 3분기부터 전산자료 제공 통보  
\* 「청년기본법」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
- (24.07.25.) 도,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건의(→민병덕 국회의원)
- (24.09.02.) 민병덕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완료 및 현재 상임위(정무위원회) 심사 중
- 행안부, 24년 3~4분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→ 도, 3~4분기 신청안내문 발송 완료(4분기 신청자 모집 중)

#### 〈쟁점법령〉

-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: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·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. 다만,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 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
-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 :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청년기본법 제21조 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주요성과 및 개선내용



### 개선 전

- 행안부가 19년부터 23년 2분기까지 분기별로 전산자료를 제공하다가 23년 3분기부터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23년 3분기 신청률(신청자수)은 전년동분기 대비 12.4%p(23,236명) 감소하였고, 24년 1~2분기 신청률(신청자수)은 전년동분기 대비 15.8%p(34,477명) 감소하는 등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량 발생함
- 또한, 22년(주민등록 전산자료 1~4분기 모두 제공) 예산 불용액(58억) 대비 23년(3분기 미제공 및 4분기 지연 제공) 예산 불용액(111억)이 약 2배 증가함

### 개선 후

- 경기도는 전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동일한 상황에 놓인 타 지자체(경기 고양시 주거인구 변화를 빅데이터 분석, 경기 광명시 평생학습지원금 사업,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지원사업 안내 우편물 발송, 서울시 성동구 성년의 날 맞이 축하카드 발송 등)와 달리 적극적으로 전산자료 제공 거부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성과를 거두었음
- 24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신청안내문 발송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24년 3분기 신규 신청자수는 24년 1~2분기(전산자료 미제공으로 신청안내문 미발송) 대비 18,381명 증가하였고, 신청률은 7.8%p 상승하였음
- 24년 1~2분기 대비 3분기 신규 신청자 수가 18,381명 증가함에 따라 183억원(18,381명 x 100만원) 가량의 예산 불용 발생을 방지함
- 4분기(신청기간: 10.31.~11.29.)에도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규신청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신청률이 90%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

(단위:명)

구분	1~2분기 평균(i)	3분기 (c)	증감분 (c-i)
대상자(d)	123,065	124,741	1,676
총 신청자 (e=f+g)	97,297	108,359	11,062
신규 신청자(f)	25,924	44,305	18,381
자동 신청자(g)	71,373	64,054	-7,319
신청률 (e/d)	79.1%	86.9%	7.8%p

### 신구조문대비표

#### 청년기본법 개정전

〈신 설〉

#### 청년기본법 개정후

제25조(자료의 제공 요청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의 수립·시행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

